

# 승객 보호 시스템 없는 고속열차 '불안'

SRT서 2명이 10분간 난동 공포…관리 승무원 2명 불과 대처 불능 철도범죄 연간 2000여건 달해…철도사법경찰 탑승 신속 대응해야

KTX·SRT 등 고속열차에 승객보호 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해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고속 열차내에서 승객 간 말다툼은 물론 폭력 사건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도, 이를 제재하고 방어할 보호 인력이 배치되지 않으면서 자칫 정신 질환자 등에 의한 '묻지마 범죄' 등 흉악 범죄에 노출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속열차 승객의 안전을 보호 할 철도특별사법경찰의 충원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2일 KTX와 SRT, 국토교통부 철도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열차 등에서 발생한 철도범죄(살인, 강도, 방화, 절도, 상해·폭행, 성폭력, 손괴 등) 건수는 2016년 1661건, 2017년 1951건, 2018년 2093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철도 범죄를 유형별로 살

펴보면 성폭력이 9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326건), 상해·폭행(260건), 철도안전법위반(147건) 순이었다. 살인(1건)과 강도(2건)·방화(2건) 등 강력 범죄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열차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수도 2016년 566건, 2017년 785건, 2018년 91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열차 내에서 단속된 인근소란(8902건), 음주소란(8902건), 불안감조성(1902건), 쓰레기 투척(2627건) 등 행정사범도 총 1만 8394건에 달한다.

특히 열차 내에서 이 같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방어하거나 처리할 시스템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로 꼽힌다.

승객 수백 명이 탑승하는 KTX(여객차량 8량 기준)나 SRT(10량 기준)에는 팀장(SRT는 객실장) 1명과 승무원 1명 등 2명이 탑승해 고객 관리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열차내에서 난동이나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내부 규정상 직접 대응이 불가능한 뒷에 피의자를 말리는 정도의 단순 제지 권한만 있을 뿐 체포나 구금 등의 조치는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사건·사고 발생시 가까운 역에 정차해 철도특별사법경찰(이하 철도경찰)을 탑승시켜야만 대처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고속열차 내에서 강력사건이 발생 하더라도 사법경찰이 대기하는 다음 역까지 길게는 수십분을 더 운행한 뒤에야 대응이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실제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께 서울발 광주행 SRT에서도 남자 승객 2명이 다른 남자 승객 1명을 상대로 10여 분간 육성을 퍼붓고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폭행 피해자와 같은 칸에 태고 있는 승객 수십명은 열차가 속행역에 도착하고 철도경찰이 투입될 때까지 불안에 떨어야 했다.

평소 KTX로 서울과 광주를 자주 오간다는 정도씨는 "평소에도 열차 내부에서 승객들 간의 각종 시비로 인해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해 불안하다. 요즘은 장소와 상대를 가리지 않는 흥기 난동도 많지 않

느냐"면서 "승객 수백명이 탑승하는 고속 열차에는 철도경찰을 한명이라도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한 범죄 전문가들도 "고속으로 운행되는 열차는 항공기와 비슷하게 밀폐된 공간이다. 열차 내부에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정신질환자 등의 '묻지마 범죄'가 벌어진다면 대형 인명사고로도 이어질수 있다"면서 "초기에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현 철도경찰의 인력만으로는 적절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기준 광주철도경찰의 총 정원은 55명으로 전남과 전북(송정·익산·순천센터) 지역까지 모두 대응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하루동안 운행되는 열차만 252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광주철도경찰의 한 관계자는 "철도 이용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철도경찰 인력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열차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선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윤창호씨 숨지게 한 운전자

2심서도 징역 6년 선고

법원,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전지환)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으로 기소된 박모(27)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박씨에게 "살인과 다른 바 없는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양형 기준을 넘는 징역 6년(검찰 구형 10년)을 선고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1인 세대에 전달할 김치 담가요"

22일 광주시 동구 자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산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과 주민들이 1인세대에 전달할 김치를 담고 있다.

## 법원 "방통위, '망 사용'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위법"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부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페이스북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

준)는 22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

을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해외 IT 업체의 망 사용권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넷플릭스 등은 국내 통신사에 막대한 망 부담을 주면서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임야**  
삽니다.010-6834-7400  
※맹지사절/신속처리※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 무안군 동탄면 대형펜션

영산강 접 경관 최고 땅 4900㎡ 펜션 14동과 수영장 등. 광주서 20분 목포서 10분, 토지상의 2천여평은 복지시설 노유시설에도 최고임. 32억

### 팬션·전원주택지

- 영광 백수읍 백암리 서해안 조망최고 대지 등 1130㎡ 1억3천
- 원도군 청간면 신흥리 대지 440㎡ 주택 53㎡ 수양생활 최적 4500만원
- 무안군 청개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 인근 4500만원

### 투자·매도·교환

- 남구 덕님동 매립된 땅(땅) 8232㎡ 주위조경좋음 9억4800
- 남구 덕님동(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수목장 허가지 덕님동(화순읍 세령리) 6645㎡ 조망좋음 2억
- 사찰적합 남구 덕님동 산 26951㎡ 건물 67㎡ 주위환경 좋음 8억
- 운동동 아파트 상가 지하 205㎡ 사무실·창고 등 다용도 운행 8천 교환 1억8천
- 서구 치평동 대행건물 중 1층 264㎡ 현공설립 디중도 가능 운행 11억 교환 22억
- 국성군 입면 매월리 임야·전 24092㎡ 약초재배·농장 등 적합 9천만원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환경 664㎡ 2층주택 4억4천

### 상가 건물

- 목포 옥암동 여관객실 27 대지 439㎡ 건평 989㎡ 국민은행 4억 매도 5천만원
- 문흥동 4층빌딩 410㎡ 건평 613㎡ 인접 30평공실과 16실 전세 1억8천 월 510.14억
- 농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개가 49평은 공실 17억
- 월선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특급 물건

- 요양시설 최고 영광 백성면 땅 5416㎡ 1층 477㎡ 중층가능 환경양호 운행 4억 매도·교환 8억5천
- 목포대 인근 무안정계 2층 주거지 4413㎡ 죽립 294평 투지에 좋은 4억4천
- 신안군 암태면 부두서 배로 10분 둑길 5623㎡ 농립생활에 적합 3억6천
- 담양군 대덕면 잡종지 8451㎡ 도로연결 좋은 물류창고 등 대도로 8억(은행4억5천)
- 담양군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 적합 교환가능 12억
- 영암군 학산면 양성강집 산 97404㎡ 감정 894천원 하자 5억8천 매도 3천
- 담양군 다시면 광복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역문앞

## 장성토지매매!!

■ 4층, 30평 Apt50채 건축부지

<1가구 전원주택지로 최고>

■ 지 번 :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648-1, 2 및 38, 나대지

■ 면 적 : 3,646㎡(1,104평)

읍에서 5분거리

### 환경

좌측 : 바로 옆 피톤치드 편백숲, 꿈의산책길·오솔길

우측 : 대형블루베리농장·한상의 캠핑장·맛집

■ 감정가 : 8.8억(평당 80만원)

■ 매매가 : 7.7억여원(평당 70만원)

■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입 가능

문의 010-3602-3881(주인)

## 조선대 새 총장 선출 규정 확정

9월 말~10월초 선거 치르기로

총장 겨우 문제로 내용을 겪는 조선대 학교가 다음달 개교기념일에 맞춘 차기 총장 선출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에 교육부 소청심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 복귀를 주장해 온 강동완 전 총장은 열차 내부에서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정신질환자 등의 '묻지마 범죄'가 벌어진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수 있다"면서 "초기에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22일 이사회를 열어 차기 총장 후보자 선출 규정을 확정했다. 선거는 직접 투표 방식으로 하되 교원 75%, 직원 13%, 학생 8%, 동창 4% 비율을 반영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득표자가 결선 투표를 하게 된다.

입후보자는 1인당 3000만 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해야 하고, 5명까지 선거운동원을 등록할 수 있으며, 사퇴할 경우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선출 규정의 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장 초빙 공고를 하도록 했다. 공고일로부터 30일 이후 40일 이전에 선거를 치른다는 규정을 고려하면 선거는 다음 달 말에서 10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법인 조선대와 이사회·대자협·혁신위원회는 그동안 설립 73주년 기념일인 9월 29일을 즐음해 새 총장을 선출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채용 비리'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 4명 집행유예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된 광주은행 전·현직 간부 4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황혜민)은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은행 전·현직 인사 담당 간부 4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6년 채용에 개입한 임원 A씨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 부장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5~2016년 광주은행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당시 자신의 자녀가 지원한 2차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별, 출신 대학별로 인원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면접관의 면접 결과를 사후에 바운 차체가 재량권을 넘어서 행위이고,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틀린 결과를 보면 그러한 인사 정책 요구가 반영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부장판사는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일반 지원자의 박탈감을 가져오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다만 광주은행이 공공기관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청탁받은 것은 아닌 점, 과거 관행을 따라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진표 기